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약 비교분석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최영근*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1. 매니페스토의 이론적 고찰
 - 2. 정책공약 비교분석에 대한 고찰
- III. 대통령선거의 정당정책과 공약 비교분석
- IV. 정책과 공약대결의 공명선거를 위한 방안
- V. 결론

I. 서론

대통령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커다란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국정을 이끄는가에 따라 많은 정책 및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및 그 외의 선거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이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정치 불신 및 무관심 풍조 팽배로 이성적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토하는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연구원

정치문화가 취약함에 따라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 그것도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이미지 중심으로 후보자가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지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중심으로 선거문화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미숙한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검증이 보다 철저히 행해지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 및 정당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인 공약을 기초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후보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각 후보자와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차별화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미지보다 정책을 우선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형성(매니페스토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종 언론 보도물과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정책과 공약을 근거로 제17대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분야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진행될 선거가 공명선거를 유도하고 인물위주의 선거에서 탈피하여 정책위주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데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매니페스토의 이론적 고찰

가.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성격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이다. 당

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고,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토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선거후에 정권을 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슬금슬금 넘어가는 과거 정치권의 구태와 선심성 공약을 난발하기 위해 만든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공약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선거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문서화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가 꼭 필요하다.

나. 매니페스토의 효과와 한계

SMART / SELF 평가 프레임워크의 개선을 통한경기도 군포시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의 정책성 평가 및 그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정수호, 구자현) 참조

<표 1> 매니페스토의 효과와 한계

효 과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간 정책을 통한 공방과 선거운동 문화조성 : 그동안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같은 negative적인 선거풍토를 떠나 공약을 통한 opposite적인 선거운동문화를 조성 -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고민과 당선 후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감 부여 : 이러한 선거문화 풍토 속에 후보자들 스스로 공약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질 좋은 정치일꾼을 만들 수 있음 - 유권자들의 지나친 정당과 학연·지연을 통한 기존의 선택에서 정책과 인물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게 됨 : 후보자의 소속정당, 학연·지연과 같은 지표를 비중 있게 보고 공약에 대해 무지했던 유권자들이 공약을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부각될 것임 -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형태에서 지방분권적인 정치문화형성의 기반 마련 : 중앙당 차원의 정당, 이미지 위주의 정치문화 형태에서 지역살림을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을 뽑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들 스스로 공약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motive를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의심 : 각 지역의 후보자 공약을 평가하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정당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의심 - 과도한 공약선거 풍토유발 :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임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자칫 공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춰짐 - 재선을 위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공약관련 정보 : 이미 시정을 경험한 후보자는 행정정보 등 여러면에서 공약제시시 유리할 수 밖에 없으며 기초자치와 같은 소규모 지역으로 갈 수록 이는 더해질 수 밖에 없음 - 광역자치단체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등의 선거에서는 언론과 유권자의 무관심 : 언론이 negative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정책공약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 매니페스토평가를 통해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의 공약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루트가 부족 : 해당후보자들의 공약을 비중있게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선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공식루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꽃 피운 매니페스토는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반드시 실현가능한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보방안을 밝혔으며 공개평가를 통해 검증하였고, 집권 후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영국 국민의 신뢰

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됐으며, 검증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면서 생활문화의 틀마저 바꾸고 있다. 2004년에는 전국규모의 첫 매니페스토 검증대회가 열려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치인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 정책공약 비교분석에 대한 고찰

(제17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평가지표, 한국정책학회 참조)

가. 정책공약의 개념

선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언이나 약속,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를 모두 공약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선거공약은 일반적으로 선언적·수사적 의미의 공약(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를 지향하겠다.”는 식)과 실천적 의미의 공약(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천적 의미의 공약을 정책공약(policy pledge)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가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지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중심으로 선거문화가 변해야 한다. 정책선거를 통한 후보자 검증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책공약이란 후보자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공약에는 후보자의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나. 정책공약의 범위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정치철학, 국정이념, 국정방향, 국정지표, 기조정

책, 정강, 정책, 정견, 방침, 계획, 전략, 과제, 약속, 다짐, 예측, 해석, 판단, 견해, 생각 등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공약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공약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공약의 범위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정책 및 실행계획 등의 꾸러미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이상이나 이념, 철학 등 개별 정책들과 연계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요소들은 정책공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정책공약의 구분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제시한다. 수많은 정책공약에 대하여 일일이 후보자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중요도나 비중을 두어 상호 비교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공약을 일정한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분류 항목의 수가 많으면 정부의 기능을 잘 반영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차별화하는 데에는 유리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인지 능력이나 순위 매김에서의 편의성 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책공약을 분류하는 항목의 수가 적으면 정책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쉽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들을 차별화하는 데는 실패하기 쉬운 것이다.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첫째,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① 정치·행정, ② 외교·안보·통일, ③ 경제·과학, ④ 교육·문화·사회 등으로 구분하고, 둘째, 정부의 기능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다시 몇 개의 분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정책공약 분류방법

대분류	중분류
정치·행정	① 정치 ② 행정 ③ 지방자치 ④ 기타
외교·안보·통일	① 통일 ② 외교 ③ 국방·안보
경제·과학	① 재정·세무·경제 ② 건설교통·부동산 ③ 농림·해양·수산 ④ 상공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문화·사회	① 교육 ② 환경 ③ 생활(보건복지·노동·여성·청소년·문화·체육)

Ⅲ. 대통령선거의 정당정책과 공약 비교분석

1.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특징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세 가지는 많아지고 여섯 가지는 없어지거나 줄어든 ‘3다(多) 6무(無)’ 선거였다.

이번 대선에서 많았던 것은 ▲ 검증·네거티브(음해·비방)공방 ▲ 출마 후보 ▲ 범여권의 이합집산이다. 검찰이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한 김경준으로 시작해서 김경준으로 끝난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도곡동 땅, 자녀 위장전입·취업 등이 후보와 관련된 검증·네거티브가 1년 내내 선거판을 좌우했다.

12명의 후보가 본선에 등록한 것도 기록이다. 이에 따라 거리에 붙은 대선 공식 벽보의 길이는 7m, 투표용지 길이는 22.1cm가 됐다. 과거 최다 후보 기록은 1987년과 1992년의 8명이었다.

범여권이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 등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한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 여당 ▲ 정책 ▲ 후보단일화 ▲ 금품살포·관련선거시비 ▲ 북한변수 ▲ 지역주의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선 대선 내내 ‘여당’

을 표방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사라졌다. 그 바람에 ‘여당’ 대신 ‘범여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판을 흔들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또 2002년 대선의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나 97년 김대중·김종필 단일화 등이 대선 구도를 좌우한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단일화가 없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차떼기’의 역풍 등으로 대선 때마다 있었던 금품살포 시비가 사라진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대선 때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줬지만 이번 대선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북한 변수는 약화됐다 할 수 있다.

또 과거 대선 때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감정이 부각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거 운동도 지장 없이 하는 등 지역색이 많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2. 정당별 기본정책 분석

가. 대통합민주신당

<표 3> 대통합민주신당 기본정책

대통합민주신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일자리 중심의 차별 없는 성장 구현 2)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2. 사회·복지 분야 1) 사회대통합 실현 2) 4대 불안해소를 통한 가족행복시대 구현 3. 교육·환경 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 강국 건설 2) 쾌적한 환경, 건강한 환경 4. 정치·행정 1)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및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2)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부패 없는 투명사회 구현 5. 외교·안보 1)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상 정립 2)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경제·문화공동체 확립

나. 한나라당

<표 4> 한나라당 기본정책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중산층 복원-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폭 줄임 2)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 살려 FTA파고를 넘김 3)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림 4) 국토활용 가치를 높여 명품국가를 만들 2. 사회·복지 분야 1)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 3. 교육·환경 1)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다짐 2)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섬 4. 정치·행정 1)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 정부의 GLOBAL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5. 외교·안보 1)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통일국가 완성을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시대를 만들

다. 민주노동당

<표 5> 민주노동당 기본정책

민주노동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성장산업 육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1000만 고용안정을 이룸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 2. 사회·복지 분야 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소득양극화를 해소 2)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3. 교육·환경 1)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 2)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임 4. 정치·행정 1)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를 실현 2) 새로운 공화국,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 5. 외교·안보 1)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당당한 외교로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만들 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

라. 민주당

<표 6> 민주당 기본정책

민주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新성장경제론으로 지식경제와 중산층강국 건설 2) 개방경제 적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신제도 도입·규제개혁·세제개혁·구조조정으로 기업투자 의욕과 성장 동력제고
2. 사회·복지 분야	1) 중산층강국 건설과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행복국가 지향 2) 문화대국 건설 : 문화로 행복하고 부강한 한국 건설, 한국문화의 세계화 촉진
3. 교육·환경	1) 교육 강국 실현 :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 2) 국제수준의 생태환경보전체계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4. 정치·행정	1) 의회민주주의 확립, 강력한 중도개혁세력 구축으로 보혁구도를 지양,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 화합적 정치문화 구현, 분권화 개혁 단행 2)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실현
5. 외교·안보	1) 외교안보정책 기초의 연미선린(聯美善隣)원칙을 굳건히 하여 한반도평화시대 창출과 아태프런티어강국 건설 2)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체제 구축

마. 국민중심당

<표 7> 국민중심당 기본정책

국민중심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민생 중심의 경제 실현 2) 기업하기 좋은 선진경제 · 과학기술 강국 실현
2. 사회·복지 분야	1)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공동체 실현 2)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 건설
3. 교육·환경	1)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지식교육 강국 건설 2) 환경·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사회 건설
4. 정치·행정	1) 국민중심의 분권형 책임정치를 통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구현 2) 분권과 자율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실현
5. 외교·안보	1) 능동적 경제중심의 실리외교와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2) 자유민주·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실현

바. 창조한국당

<표 8> 창조한국당 기본정책

창조한국당 10대 기본정책	
1. 경제·민생분야	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2. 사회·복지 분야	1)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2)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3. 교육·환경	1)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2)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4. 정치·행정	1)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2)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5. 외교·안보	1)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2)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3. 후보자의 분야별 공약 비교분석

가. 후보자별 공약내용

1) 경제 분야

<표 9> 후보자별 경제분야 공약내용

구 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경제 성장	경제성장률	6%안팎	7%	6%	언급 없음	7%	8%
	일자리창출	250만개	300만개	언급없음	1,000만개	300만개	500만개
	성장 동력	·중소기업육성 ·개성공단확대 ·대북협력	·투자활성화 ·생산성혁신	·10만 핵심 중소기업육성	·지역공동체 혁신클러스터	·지역경제활성화 ·새만금경제특구	·북미수교 ·환동해경제협력
대기업	금산분리	유지	완화	기업의 신뢰 얻을 때까지 유지	유지	완화	유지
	출자총액 제한제	보완, 순환출자금지	폐지	우선 완화, 궁극적 폐지	유지	완화	유지
	수도권규제	선별적 완화	전면 재검토	재검토	유지	부분적 완화	사안별 완화

구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중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 정부 R&D 예산 50%(5조원)중소기업 배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감면 · 대기업-중소기업불공정거래관행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은행 민영화한 재원으로 중기 지원 · 중기 법인세율 인하 · 소규모 기업 상속세 감면 · 벤처기업 거래소 설립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제공 ·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개 핵심 중기 육성 · 중기 상속세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제조업체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학 기술 기반 중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 지원 중기 집중

2) 여성/복지 분야

<표 10> 후보자별 여성/복지 분야 공약내용

구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육아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05세 이등무상 보육,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육체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세까지 보육비 국가부담 · 영아 전담시설 1동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에서 취학까지 무상교육 ·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보육 · 아빠 유급출산 휴가제도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까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 신축아파트 1층 공보육공간 활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연금 도입 · 장애유형별 소득보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스템 개발 · 방문간호사업 및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장애연금 확대 ·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보장구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장벽해소 · 장애인 소득 보장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4%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확대 · 정부 고위직 여성 참여 확대 및 공기업 등 관리직임용 목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 공공부문 여성 승진 인센티브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 육아 휴직제도 개선 · 영세 창업여성을 위한 소액무담보 대출 투자기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 고위공무원 여성 30%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여성할당 비율 40%상향 조정 ·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2012년까지 OECD수준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 여성할당제 강화
결혼 이혼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 구제결혼 중재행위 단속과 처벌 ·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취업 창업지원 · 지원센터 확대로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제도 개선 · 전국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빈곤,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쉼터 확대 · 외국인 정착 지원과 농어촌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 및 정착 지원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5년 더 일하기 사회로 · 노인대학지원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및 운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 확대 ·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정책 실시 ·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 60%까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연금지급액 상향조정 및 한방 건강보험급여 확대 · 치매, 중풍과 허위 난치성 질환 간병 및 치료의 국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3) 교육 분야

<표 11> 후보자별 교육 분야 공약내용

구 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대학입시	· 대학입시 완전 폐지	· 3단계 대입자율화 · 2012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 대학자율 · 대학의 학생선발권 대폭확대	· 대입 폐지와 대학 평준화	· 입시제도 단순화 · 논술시험 폐지 · 내신반영 비율 자율화 · 수능시험 이원화	· 기회균등 선발제 전면 확대 · 지역별, 소득별, 성별 할당제
3불 정책	· 유지	·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폐지 · 기여입학제 신증	· 본고사 허용 ·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부정적	· 법제화로 유지	· 존중해야	· 일단 유지
고교	· 300개 우수 공립고 육성 · 교장공모제 도입	· 300개 공사립 특성화고 지원 육성	· 사립고 완전자율화	· 초중고교 1,300개 신설	·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현행 57개에서 100개로 확대	· 자율형 공교육 전면 확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 부분 축소	· 대폭 확대	· 대폭 확대	· 폐지	· 대폭 확대	· 대폭 축소
교육내실화 (유초중고)	·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 영어평가 단계별 인증제 도입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 · 바른인성 책임제	· 구체적 언급 없음	· 다양한 가치 교육 실시	· 고교 20% 장학금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규제 대폭 완화
교육복지	· 영어교육 연1800시간 실시 · 영어 국가공인제 도입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영어 공교육 완성 · 평생 학습체제 구축	· 영어 공용지역화 · 5세까지 교육비 지원	· 교육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대학생 교육비 경감	·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무이자 학자금 융자 확대	· 고교교육 무상으로 전환
교원처우	· 교원평가제 필요	· 교원평가제 필요	· 10년마다 교사 자격 갱신제 · 교원 성과급제 도입	· 교육과정 결정권 교사에게 부여	· 교원평가제 찬성	· 교원평가제 반대
기타	·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교육	· 자립형사립고 · 저소득층 30% 입학지원	·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 초중고교 무상 교육	· 5세부터 무상 교육	· 국어, 국사교육 강화 · 영어조기 교육 확대

4) 지방자치 분야

<표 12> 후보자별 지방자치 분야 공약내용

구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행정도시	· 찬성	· 계획대로 추진	미국 주정부수준의 광역자치정부	· 찬성	· 일관성 있게 추진	· 찬성
지역균형개발 정책	· 지역별 특화 아 이템과 클러스 터 조성	· 전국을 서울을 뺀 권역으로 개발	-	· 행사부 해산, 국가균형발전 부 설치, 자립 교부세 도입	· 권한이양, 신경제 특구 설치	· 전국을 수도권 을 포함한 5개 초광역 클러스 터로 육성
수도권 규제	· 수도권 공장총 량제 고수하지 만 입지 규제 현실화	· 직접적 찬반입 장 없음	-	· 수도권 규제완 화 반대	· 직접적 찬반입 장 없음	· 직접적 찬반입 장 없음

5) 부동산 정책분야

<표 13> 후보자별 부동산 정책분야 공약내용

구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종부세	· 현행 유지	· 장기 1주택자 완화	-	· 강화	· 완화	· 유지
양도세	· 장기 1주택자 완화	· 장기 1주택자 완화	-	· 강화	· 1주택자 완화	
재건축규제	· 유지	· 완화	-			
집값 정책기조	· 현 정부 정책 기조 유지	· 공급 확대	-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택 지 국유화		· 공영개발 확대, 건설비리 척결 통한 비용절감
분양원가공개	· 찬성	· 반대	-	· 찬성		· 찬성

나. 후보자별 공약의 특징(서울신문-대표집필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 간 정치공방이 극에 달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공약이 가려져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약이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등 주요 후보들은 부동산과 교육, 기업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부동산 세금 줄인다.

대선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명박 후보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도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후보는 민간아파트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는 분양가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 원인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는 대형과 소형 주택을 구분한 후 대형은 민간에 맡기고 소형은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완충정책을 선보였다.

2) 교육정책 제각각

교육정책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후보는 교육에서도 시장원리를 중시한다.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 등 입시 전권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입시 개입을 단절하고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며 수능 과목도 4~5개로 줄일 계획이다. 고교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완함으로써 평준화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정동영 후보는 국가 주도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후보는 수능을 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침도 내놓았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선보였다. 특히 교사 10만명을 추가 확보해 경쟁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3) 기업정책에도 시각차

각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일제히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크다. 이명박 후보 기업정책의 큰 줄기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 대기업은 이른바 ‘No Touch’로 표현되는 자율화다. 이 후보는 일찌감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기업에 ‘당근’을 제시했다. 기업이 신이 나와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재벌의 은행 지배, 구체적으로는 삼성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아직 재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20조~30조원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규제 총량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회창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규제를 시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당하기로 했다.

4) 그 외 군소후보들의 이색공약

지지율과 원내 의석수가 기준에 모자라 ‘주요 후보군’에 들지 못하는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등 4명의 정책을 살펴보면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후보는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임기 중 부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허경영 후보는 ‘튀는 말’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자신을 “지능지수(IQ)가 430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했다.”고 소개하며 신혼부부에게 1억원 지원, 중소기업 취직 시 100만원 쿠폰 지급, 유엔본부 관문점 유치 등의 파격 공약을 제시했다.

군인 출신인 전관 후보는 공개, 공평, 자율의 공동경영만이 국민통합의 새 시

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전체적인 공개적 토지관리를 주장했다. 전 후보는 또 가정파괴범 등 우선처결 범죄에 대해 1년 이내 형을 집행해 사회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진보’를 주장하는 금민 후보는 “연기금으로 대기업 주식을 사들여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4. 제주지역관련 공약내용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첫 번째는 한결같이 제주도를 진짜 특별자치도, 진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중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자치권’에 무게를 뒀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약속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제주도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던진 알팍한 ‘공약’이 아니라 진짜로 약속한 공약일 경우 제주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한꺼번에 펼쳐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에서 실현가능성은 제쳐두고 일단은 표를 얻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장미빛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적극 검토하고, 2011년 제주 전역을 관광객전용 면세지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13대 핵심공약 및 공약 5가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또 제주지역 모든 기업 법인세를 13%로 인하하고, 4·3 국가기념일 지정도 약속했다. 제주도지사에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해 특별기 운항명령요청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 **대통합민주신당 13대 핵심 제주공약**

○ **법인세 인하, 관광객전용 면세특구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국내외 자본 투자유인책으로 제주지역내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5%에서 13%로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신당은 법인세 인하는 제주지역에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에 한해 적용하며, 본사기준은 임직원 수 기준, 과세대상은 지역내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관광객전용 면세특구는 1단계(08~09년)로 도내 일반상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개별 명품상가, 호텔, 전문휴양시설, 외국인 관광객 전용식당 등 특정지역을 쇼핑 및 면세특구로 지정하며, 2단계(10~11년)에는 도 전역을 면세지역화 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적극지원, 동북아 항공교통거점도시 육성**

국제자유도시 및 대규모 관광프로젝트 추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 등 향후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제2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공항건설 추진위 구상도 제시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해 특별기 운항명령요청권을 부여해 좌석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항공요금 인하를 적극 추진해 제주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 **4·3평화재단 설립 등 4·3문제 완전 해결**

통합신당은 4·3평화재단 설립과 유족복지사업 등을 위한 기금조성을 약속했다. 제주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을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4·3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자산 500억원 중 400억원을 국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 **FTA대비 감귤진흥기금 조성**

감귤류 등 과일수입관세를 재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미FTA를 대비한 한시적 감귤진흥기금조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기존의 감귤시험장을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저품질 감귤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조절명령제 발령 요건에 품질규제를 추가하며, 비상품 저급품 가공처리 수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논에만 실시중인 경영이양 직불제를 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제주수자원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고품질 제주지하수를 기반으로 물산업을 제주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KOTRA 등을 통한 제주삼다수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진흥센터 설립 및 산업화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담았다.

○ **청정 농수축산업 및 환경친화형 제조업 육성**

청정해역 특화 수산물육성을 위해 제주에 남부해역 고등어 가공시설을 지원하며, 고부가 가치인 홍해삼 생산 및 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심해양식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정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청정식품가공 산업특구를 지정하며, 환경친화기업 제주이전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친환경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제조업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하며, 유산지구내 사유지 매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통합신당은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이 송전선

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 제주도, 한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 지중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송전선로 건설시 주요 경관과 생태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 송전선로 지중화 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500기 송전선로(약 300km)에 대해 단계별 지역별 지중화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 세계적 수준 복합 크루즈항 건설

국제 크루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급증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5만톤급 국제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한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제주도민에게 제안했다.

○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제주유치

동북아 평화의 상징인 제주도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사무국’을 유치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 국립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설립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연구소, 국립환경, 한국해양, 산림과학연구원 등이 산재된 상태이며, 제주는 남북방 식생이 공존하는 한라산과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기후변화연구, 에너지 연구, 교육연수 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신당은 기후변화협약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가칭)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 및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적극 지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시범학교 2곳을 개원하며, 2013년까지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비를 지원하며, 국제자유도시 추진 인력양성과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동북아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0% 채용할당제

통합신당은 마지막으로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선발할 경우 30%를 제주지역 인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채용목표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역인재를 30%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내 놓았다.

▶ 5가지 추가공약

- 헌법 개정 논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적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세 재정특례 강화
- 관광객전용 카지노 허용
-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조성
- 동양 최대의 해양과학관 건립 국책사업으로 추진

나. 이명박 당선자(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제주공약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집과 한나라당 제주선대위를 통해 약속한 10대 핵심 제주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 제주도를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치도시로 만들며, ▲ 법인세를 12%로 인하 하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기업의 제주진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면세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제주 전지역을 면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및 제주시민을 위해 국립제주

극장을 건립하고 제주평화대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 UN평화활동, 아·태지역 센터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다.

○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현재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1천2백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있다고 전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국제공항을 산남지역에 건설, 제주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약속했다. 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10년에 공항 건설에 착수, 2017년 정도에 완공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 FTA대응과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FTA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대비해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 감귤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함께 농촌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을 갖춘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비 절감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및 유통센터 30개소 건설 등을 추진 ▲ 감귤경쟁력 강화 사업비 보조금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인상하고 ▲ 감귤재배농민과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상물류비 등과 같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해외연수 붐으로 국부유출이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최대한 활용,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교류의 도시로 부각시켜 영어능력 배양의 요람으로 조성하고 교육 다양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 제주도에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고 서민 및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글로벌 영어인재를 양성하며 ▲ 해외유학·연수 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교육환경도시

를 건설하고 주거·상업·교육 등의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생태관광자원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세계자연유산을 널리 알려 관광제주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대책과 지속적인 세계유산 보존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 제주세계유산보존센터를 설립하여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상층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귀중한 세계유산을 보호하여 체계적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지구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안정적 수산물 생산, 그리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 바다의 종합적 이용·관리와 효율적인 자원조성을 통한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 해양자원 조성 및 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급 어패류를 중심으로 한 제주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 지역개발의 균형을 위해 남원읍 지역 바다에 대한 특성 및 생태계 모델 개발 후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종묘 방류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 수중체험시설 도입으로 바다 생태계 관광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체험장 등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중유 연료에 의한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자치도 예상전력 수요 1천5백kW전력설비 중 10%를 신재생에너지를 대체, ▲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으로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3개지역 1500호에 태양광 143kW를 보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 150mW 전력생산 풍력단지 5곳을 조성하고 ▲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따른 탄소 배출권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조성**

FTA에 대응해 축종별 경쟁력 강화시책 및 생산비 절감형 사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광역브랜드화, 말 생산, 말 관련 식료품 및 화장품 개발, 전통 마목장 복원, 제주마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제주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제주도를 세계적인 마필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의 복합건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필요하며, 해군기지 입지 지역 주민에 대해 가시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서귀포에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을 건설함으로써 서귀포시 지역에 획기적인 관광객유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구체적으로 ▲ 15만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시설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해 획기적인 관광객유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역외금융센터 건립**

아일랜드 더블린과 같이 특정지역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자치권 부활 -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 선출**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자치권 부활'을 제주공약 전면에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상반기에 새로운 제주형 기초모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전제할 경우 제주지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권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 선출

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2008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안을 삭감,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제주해군기지 추진 중단을 선언, 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군비증강 억제정책을 실현.
- 제2공항건설, 급증하고 있는 제주 관광객에 대비한 공항 건설은 여타 부실 지방공항과 달리 수요성 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함.
- 제주 4·3 항쟁정신을 현재에 맞게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당면한 4·3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진상규명 지속, 4·3 수형인 문제 해결, 국가배상권 등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주 4·3 관련 중고교 교과서 오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4·3 항쟁 당시 미국의 학살 책임을 묻는 국제기구 제소를 추진함.
-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것. 만약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가 비준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한 정책으로 '제주감귤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귤재배에서 유통, 가공 등 지원을 제도화할 것이며 제주경제를 고려해 관광, 농자재, 포장 등 관련 산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조달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 또한 '유통명령제' 실시를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안법'의 관련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인제 후보(민주당)

- 민주당, 특정 법인세·부가세 지방이양, 제주도 재정자립도 80% 이상 유지, 강력한 지방분권과 혁신·지방자치 완성할 것

민주당도 2009년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국가사무 완전이양을 통해 강력

한 지방분권과 혁신, 지방자치 완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정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5년이내에 현재 30% 수준인 재정자립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4+1 핵심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대규모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 걸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제주도를 아시아·태평양시대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남지역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지역항공 국제노선 취항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해군기지 건설은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는 일인가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이 순서임.
- 4·3 평화공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와 동시에 임기내에 4·3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4·3 추념일 지정 추진을 지원하며,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4·3 평화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4·3과 연계한 평화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제주도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
-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단위 직불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소득안정정책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와 더불어 농가나 자영업체를 선별하여 상품기획, 생산, 유통, A/S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유통구조를 개혁하겠음.

마.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

- 창조한국, 글로벌 석학 '제주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 국무회의 제주도지사 배석

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국내외 글로벌 석학 30인 내외로 구성된 제주위원회로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을 뒤 제주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제주선대위는 보통교부세와 균특회계로 만들어진 제주계정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권한이 없는 반쪽자리 제도”라며 제주계정을 ‘제주 재창조 계정’으로 바꾸고 재정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에 서울시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해 발언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내 놓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순한 특별시 정도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군기지 건설은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관문에 제주가 있기 때문에 큰 해양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민간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비상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함.
- 제주를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 평화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항만시설도 필요하고 폭증하는 항공 수요에 맞추어 공항시설도 확대되어야 함.
- 대정부 7개 건의사항중 현재 추진 중인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사업,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진지한 지원과 실천을 약속한다. 그리고 4·3 평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겠다.
- 제주 농업이 주변 국가, 북한까지 염두에 둔 글로벌 판매 및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제조개혁센터를 설치하여 주변국과의 구상무역을 활성화하겠다. 신제품 감귤 개발 활성화 및 유망 감귤 품종의 재배를 늘려 감귤 수

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제주의 천혜의 환경을 통한 청정농산물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본, 대만 등에 매력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고 한미 FTA가 어떻게 진전되더라도 제주의 감귤농업은 축산, 쌀 등과 함께 반드시 지킬 것임.

- 1만개 제조업체 유치와 일자리 10만명 창출, 100만명 인구가 상주하는 동북아 허브도시로 재창조
- 제주평화포럼과 연계해 제주세계평화 NGO 연대 페어를 격년제로 개최
- 세계다문화 교육연수단지 조성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장기체류 외국인 등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과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R&D센터와 제주생태자원센터 설립
- 제주를 아시아 경제공동체 평화수도로 육성 : 세계관광정책포럼 창설, 10년전 제주가 주도해 시작했던 관광정책포럼(ITOP)의 사무국을 확대 개편, 세계관광정책포럼 사무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제시

바. 이회창 후보(무소속)

강소국연방제 실시, 지방자치권 강화, 해군기지 환성, 제2공항 건설 적극 추진, 1차산업 보호차원서 면세유 영구 공급

▶ 이회창 후보 제주지역 8대 공약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 현 제주공항 확장 및 제2공항 조기 건설
- 제주토착자본 형성 및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개발기금 조성
- 제주도민의 합의를 대전제로 한 '제주카지노공사' 설립 적극 지원

- 제주유통공사 설립을 통한 산지경매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 기준가격고시제도 적극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를 해양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발전
- 제주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 세계 각국의 문화마을을 조성해 제주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제문화센터 건립

▶ 그 외 공약

- 해군기지 건설의 가부는 국익이 우선 고려되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함.
- 제주 4·3의 문제가 특별법 제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4·3평화공원조성사업의 정부지원 축소로 차질을 빚는가 하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기 수행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범위 또는 국가보상 등을 검토해야 함.

1) 제주도민이 바라는 공약내용(한라일보-대선과 제주/대선공약 이것만은, 참조)

(1) 해저터널 건설사업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이다.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도 정책과제로 삼아 전라남도와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대중앙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제주도 등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에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2) 제2공항과 항공자유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제주도의 항공의존도

는 절대적이다.

지금의 제주공항 부지면적은 다른 국제공항의 1/2수준인 1백6만평에 불과, 근본적인 확장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심과 2km 안팎에 위치, 소음피해와 고도지역 제한 등에 따른 개발제한 문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활주로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슬롯 부족, 대형 항공기 이용 불가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야시간대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제약받는 현실은 국제공항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야간 출발이 가능한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기 야간 운항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휴양형 주거단지나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 국책사업인 제주영어도시 사업 등은 많은 관광객들을 제주로 끌어 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내선 비용구조에 적합한 소형기와 저비용 항공사 출현으로 인해 항공수요와 운항횟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공항으로는 부족하고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영어교육도시 · 로스쿨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또 지방대학 발전과 제주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에 반드시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정읍 보성 일대에 ‘영어전용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확정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방안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제주영어전용타운내 국립학교 설립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로스쿨이 설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009년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에 전국 41개 대학이 접수했다.

(4) 5대 전략 · 35대 실천과제(제주발전연구원, 2007년 9월 작성)

<표 14> 제주공약 5대전략·35대 실천과제

5대 전략	35대 실천 과제		
국가경쟁력을 예인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1. 관광객전용 면세특구 조성 2. 국제회의산업의 메카 육성 3. 관광객전용카지노 허가권 부여 4. 미래형 제2관광단지 조성 5. 국립제주극장 건립	관광 문화	
	6.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교육	
	7.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	
	9.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금융	
	10. 신공항 건설 추진과 항공특구 지정 11. 수요자 중심의 항공 운영 12. 세계적수준의 복합 크루즈항 건설 13.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 14. 한라산 삭도 설치	교통	
	15. 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율 인하	제도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완성	16. 헌법에 특별자치도 법적지위 명시	제도	
	17. 자치재정권의 획기적 강화	재정	
	18. 제2 혁신도시 건설	균형	
FTA시대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	19. FTA대응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20. 제주 수자원의 산업화·국제화 추진	산업	
	21. 지방자치단체 TV홈쇼핑 설립 추진 22. 대도시 공동물류센터 건립	유통	
	23. FTA대응 감귤진흥기금 3천억원 조성	감귤	
	24. 환경친화형 제조업 육성	제조업	
	25. 신성장동력 IT·BT가 이끄는 첨단 제주 육성	산업	
세계평화의 섬 국제적 위상 정립	26.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7.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완공 28. 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유치 29.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평화 사업	
	청정환경의 브랜드 가치창출	30.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31. 환경종합홍보관 및 연수센터 건립 32. 국립 기후변화대응 연구원 설립 33. 보호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34. 제주국립생물자원관 건립 35.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제주지소 설치	환경

IV. 정책과 공약대결의 공명선거를 위한 방안

대통령선거란 사회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행위다. 국가 원수이면서 대표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행정권력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다. 대선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의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계획서를 국민들에게 문서로서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 선택받는 과정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대선공약은 주인인 유권자와 대리인인 대통령간의 계약서다. 각 당과 후보의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 되어야 한다. 부실공약은 부실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공약개발 단계에서부터 부실공약과 선심성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정책공약중심의 공명선거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대선공약이 단순히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치·전략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과정 속에서 전체 당원의 지혜를 모으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기본원칙과 방향은 개방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후보와 정당으로 하여금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선택된 정당이 연결정부라 할지라도 정책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는 일이다.

세 번째,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공약 제시가 불가피할지라도 최소한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분석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분석 자료에 문제의 배경, 정책의 목표, 정책실현의 수단 및 비용, 정책의 예상효과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제시된 정책비용 및 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검증의 자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수사 중심의 토론에서 정책토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정치·전략적 이유로 중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는 후보와 정당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게 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하는 이슈를 표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표명을 피해가는 교묘함을 막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을 대신해 공약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책적 입장보다는 큰 틀에서 각 후보의 정책적 입장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V. 결 론

우리는 대선에서 후보에 못지않게 공약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약은 후보의 소신과 능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공적으로 제시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후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출발이다.

제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 역시 소위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선거공약을 내어놓았다. 이 공약 역시 비용-효과, 환경과피를 들어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 공약의 경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에 대비해 이와 관련 된 예산을 추후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동의를 국민으로부터 사전에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효과는 선거공약의 사전성으로 인해 국민이 그것을 냉정히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선거라는 분위기에 젖어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해당 후보가 제시하는 각종 선거공약에 무조건 동의함으로써 향후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금을 축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한편 국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물론 이 국민의 책임이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공약이란 특히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개발과 관련된 선거공약의 경우 국민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당선자 공약 타당성 재검토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

보들이 내는 선거공약의 경우 반드시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사실 후보들이 내는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이 처럼 많은 예산을 담보한다. 따라서 각 후보들이 내는 선거공약, 특히 각종 개발공약의 경우 당선자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 은근슬쩍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행위이다. 유권자로서 국민은 선거공약의 이 같은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선거공약의 과제로 첫째, 이미지 선거로부터 정책선거로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의 나열식 제시에서 정책 및 공약의 쟁점 사안 구분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셋째, 유권자 눈높이에서 공약 및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공약을 대통령 선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 후보자 및 정당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간 상호 충돌되는 정책 구분으로 나열식 정책 제시를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다섯째, 먼저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특허권 인정으로 정책 베끼기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에 대해 전문가집단 평가로 유권자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선거에서는 '반드시 뺏을 하겠다.'는 등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각종 개발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대해서만 반드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결국 우리는 각종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선거공약(특히 개발공약의 경우), 이는 곧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후보들의 적극적인 이익창조 행위로 나타나기 보다는 당선 후 조건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가상준(2007), 『2007년 대선과 이념』, NGO연구 제15권 제1호
- 김영래(2006), “매니페스토운동의 의의와 선거문화의 발전전망”, 지역사회 2006 봄호(통권 제52호), p.36~46
- 김영래·이현출(2006),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논형
- 강원택(2003),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 강제상(2002),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 의미와 평가”
- 구광모(2002), “제16대 대선정책공약의 분석과 평가: 문화·공보 분야”, 중앙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141~162
- 김욱(2006),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과제”, 지방행정 7월호
- 김미경(2006), “매니페스토운동과 정책공약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영태(2006),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 참여사회연구소, 2006년 제9호
- 박명호(200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론”, 『경실련 한국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 세미나』, 2005
- 박희봉(2007),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 필요성 및 방법”, 한국정책학회
- 박홍순(2006), “5·31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월레포럼 희망모음, 2006년 6월호
- 송근원(2002), “2002년 대선공약 비교분석을 위한 기준과 척도,”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4호
- 심성욱(2007), “선거와 네거티브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 안철현(2006),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125~146
- 이강원(2006), “5.31정책선거유권자운동의 성과와 과제”, 서울 : 시민과 함께하는 월레포럼 희망모음, 2006년 6월호
- 윤용희(2000), “제16대 총선의 정책과 공약선거”, 한국동북아 논총 제14집
- 이준환(2006), “네거티브 캠페인 감소와 정책토론 증가에 기여”, 신문과 방송
- 이현출(2004), 『매니페스토(Manifesto): 국민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국회도서관, 입법정보 제141호
- 이현출(2005),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합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이현출(2006),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책정당화의 과제,”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에
관한 한일비교』, 내나라연구소

홍성걸(2007), “5·31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에 대한 SMART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2007),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7), 『‘참공약’평가 제주매니페스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동아일보 www.dongo.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s.com

제주의 소리 www.jejusori.net

제주일보 www.jejunews.com

제민일보 www.jemin.com

한라일보 www.hallailbo.c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www.manifesto.or.kr